

박재만 '현대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전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 물량팀 양산 결과 초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이전에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군산)는 오늘 2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라는 제하의 신고서를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 명의로 접수된 신고서는 피신고자인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고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선시공후계약)와 협력사 기성금 삭감으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로 파악되는 물량팀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물량팀은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의 25%를 관리비로 공제하는 계약을 진행해 안전문제와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되면서 대량실직과 협력업체의 폐업과 줄도산으로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군산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만약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

중공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다면 지역여론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의 이면에 경영권 승계 작전이 감추어져 있다는 일각의 의혹과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인건비 경쟁력 저하를 명분으로 운영되어 왔던 물량팀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악순환의 원인이다"며 "이러한 불법 인력운용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어도 경제 질

서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산조선소 상당수의 물량팀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과 퇴직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불법 물량팀 운영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적폐청산의 선봉장인 공정위가 재벌에 대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호근 도의원, 서남해 해상풍력 주민 갈등 증세

전북도의회 이호근(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보상약정 체결에 대한 주민간 갈등에 대한 도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호근 도의원은 고창지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전북도의 의견을 듣고 "현재 한국해상풍력(주)은 사업을 찬성하는 부안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의 입장만 듣고 지난해 5월경 보상약정체결을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양 주민 대표기관인 비대위와 피대위, 한해 풍, 전북도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그 자리에서는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어민들과 선주협회는 25일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고창, 위도, 격포 지역 어선 100여척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도당-공무직협, 비정규직 차별 철폐 앞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 자치단체 공무직 협의회가 '공무직법 입법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24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 자치단체 공무직 협의회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무기계약직 차별 금지 현실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 자치단체 공무직 협의회 이권로 의장은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공무직 조합원 수만해도 2452명에 달한다"며 "이들 공무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전북 자치단체 공무직 협의회가 전국 자치단체공무직 협의회와 연대해 '공무직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에 공감하고 민주당 전북도당도 공무직들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추경 불참 26인'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분회의 처리 과정에서 당 소속의원 26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불참 사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민기 수석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불참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최고위에서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소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이 먼저"라며 "최고위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는 (최고위원) 모두가 공감을 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모두가 느끼고, 개별 의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전체 당 기강을 세우는 게 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오늘 어떤 최고위에도 징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추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27일 세법개정안 협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초대기업 법인세율 증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증세에 대해 각각 '사랑과세'와 '존경과세'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에 대표가 (최고위에서) 명예과세라고 표현했다.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냈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대기업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도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공정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문제화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과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증세로 인한 기업 이탈에 대해서는 "세금은 작은 요인에 불과하다"며 "영업환경, 주요 시장,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기업이 어느 곳에 소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법인세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세계 개편안에 대해 별도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뤄진 당정협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중요 의제가 아니었다"며 "목요일(27일) 당정협의에서 세법만 가지고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문무일, '수사권 조정' 등 현안 원론적 답변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어렵다...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 소신 피력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나"고 묻자 문 후보자는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추가 수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이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자는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문 후보자는 조용천 의원이 "검찰이 보충수사, 특별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재차 "네"라고 답변해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교 교육

자녀 4명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